



보도자료

‘플랫폼 경제 민주화를 촉구하며 쿠팡을 탈퇴한다’ 기자회견
“오만한 김범석 청문회장 세우려면 ‘탈팡’ 행렬 거세져야”

■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 발송	2025.12.23.(화) 12시 00분
■ 요청	즉시 보도		
■ 일시	2025.12.23.(화) 9시 30분	■ 장소	국회 정문 앞
■ 주최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쿠팡물류센터지회, 민주노총 서울본부, 디지털정의네트워크, 평등의길, 전국결집, 노동·정치·사람		
■ 문의	강남규 (정의당 공보차장, 010-4419-4990)		

【총9쪽】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쿠팡의 악행이 드러나면서 소비자·시민들의 자발적 ‘탈팡’(쿠팡 탈퇴, 멤버십 해지 등)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들의 집단소송도 꾸준히 모집되고 있고, 정부와 국회에서는 ‘영업정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쿠팡물류센터지회, 민주노총 서울본부, 디지털정의네트워크, 평등의길, 전국결집, 노동·정치·사람은 플랫폼 경제 민주화를 촉구하며 쿠팡 탈퇴 움직임을 시민들에게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3.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쿠팡에서 28명의 죽음이 반복된 책임은 노동자의 과로와 안전 문제를 외면하고 개인 책임으로 전가해 온 김범석 의장과 무도한 기업 운영에 있다”라며 “정부와 국회가 영업정지·강제수사·청문회 등 모든 수단으로 쿠팡과 김범석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김찬희 녹색당 공동대표는 “쿠팡의 반복되는 개인정보 침해는 벌금보다 이익이 큰 독점 구조가 낳은 결과”라며 “시민들이 대대적인 쿠팡 탈퇴와 제도 개혁 요구로 기업의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이백윤 노동당 대표는 “쿠팡의 편리함은 노동자의 과로와 생명, 시민의 개인정보를 대가로 한 착취 위에 세워진 것”이라며 “탈팡 운동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과 실질적 경영책임자 처벌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을 넘어 주권자의 힘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정동현 쿠팡물류센터지회 지회장은 “개인정보 유출과 산재 은폐, 부당노동행위를 반복해 온 쿠팡의 실질적 수장 김범석은 끝내 사과도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라며 “탈팡 투쟁을 계기로

노동자의 죽음을 낳은 구조를 바꾸고 김범석이 사죄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현장에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는 “김범석 의장의 과로 은폐 지시는 쿠팡이라는 기업이 빅테크 플랫폼의 독점과 탐욕을 그대로 답습하며 노동자·소비자·소상공인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훼손하고 있음을 드러낸다”라며 “쿠팡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책임 추궁은 단순한 기업 제재가 아니라 자본에 잠식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 하은성 정의당 비상구 노무사는 “쿠팡의 회사 분할은 노조 결성을 위험 요소로 규정하고 조직 규모를 인위적으로 축소하려 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자 반헌법적 범죄”라며 “국회와 노동당국이 쿠팡과 자문 로펌의 책임까지 포함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요]

- 제목 : 플랫폼 경제 민주화를 촉구하며 쿠팡을 탈퇴한다
- 일시 : 2025년 12월 23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주최 :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쿠팡물류센터지회, 민주노총 서울본부, 디지털정의네트워크, 평등의길, 전국결집, 노동·정치·사람
- 발언순서
 - 사회 : 문정은 정의당 부대표
 - 권영국 정의당 대표
 - 김찬휘 녹색당 대표
 - 노동당
 - 정동현 쿠팡물류센터지회 지회장
 -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
 - 하은성 정의당 비상구 노무사

[내용]

- 쿠팡 탈퇴 운동 제안 및 쿠팡 개인정보 관리 소홀 등 규탄
-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입법 촉구
- 집단소송제도 도입 촉구
- 탈팡 운동의 의미와 전 시민적 대응 제안
- 각 단체별 쿠팡 대응 방향 설명
- 쿠팡 대관 로비 및 김병기 원내대표 사건 규탄
- 쿠팡의 노동문제와 쿠팡 노동자들이 보는 탈팡운동
- Again 유성기업 노조파괴? 지배·개입 목적으로 회사 분할 추진한 쿠팡 규탄!
- 기자회견문 낭독

[붙임1] 기자회견문

[붙임2] 발언문

전국적인 ‘탈팡’ 운동을 제안한다

- 쿠팡은 없어도 괜찮고, 없는 게 더 낫다

지난 주 국회에서 개최된 쿠팡 청문회는 그야말로 맹탕이었다. 창업자 김범석 의장은 글로벌 CEO 윤운하며 출석을 거부했고,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전직 대표 두 사람도 온갖 평계로 비겁하게 도망쳤다.

총체적 부도덕 기업 쿠팡은 결코 스스로 반성하지 않는다. 김범석 의장은 한국이 ‘호구’로 보이는가? 이 모든 사태가 잠시 뒤면 지나갈 소나기로 느껴지는가? 한국인들은 어차피 쿠팡을 버리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가?

우리는 쿠팡의 오만방자한 착각에 경종을 울릴 것이다. 우리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탈팡’ 운동을 조직할 것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쿠팡을 탈퇴하고, 멤버십을 해지하고, 쿠팡 이용을 줄이도록 설득하고 독려할 것이다. ‘쿠팡 없을 땐 어떻게 살았지?’ 김범석 의장의 목표라던 그 말을 우리는 이렇게 돌려줄 것이다. ‘쿠팡은 없어도 괜찮고, 없는 게 더 낫다.’

우리의 목표는 김범석 의장을 이곳 국회의사당으로 끌어내는 것이다. 청문회장에 세워 자신의 입으로 직접 이야기하도록 하는 것이며, 전 국민 앞에 그간의 수많은 악행들을 사죄하도록 하는 것이다. 얼마나 쿠팡 이용을 줄이면 김범석이 나타나는지 보겠다. 얼마나 멤버십을 해지하면 김범석이 입을 여는지 보겠다. 얼마나 탈퇴하면 김범석이 청문회장에 설지 보겠다.

시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탈팡 행렬에 함께해 주십시오. 전체 매출의 90%가 한국에서 발생함에도 여전히 한국인을 깔보고 호구 취급하는 김범석 의장에게 분명한 경고를 보내주십시오. 노동자를 조롱하고 국회를 우롱하는 김범석 의장에게 위기감을 만들어 주십시오. 오직 자기 자신 하나를 지키기 위해 수백억 대관 로비를 움직이고 노조 설립을 방해하며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아 온 김범석 의장이 한국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탈팡만이 쿠팡을 정신 차리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쿠팡 없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우리가 없으면 매출의 90%를 잃습니다. 감히 우리 머리 꼭대기 위에 서고자 하는 오만한 쿠팡 김범석 의장을 우리 손으로 직접 끌어내는 탈팡 운동에 함께해 주십시오.

2025년 12월 23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1. 김찬희 녹색당 공동대표

전시민 쿠팡 탈퇴로 본때를 보여주자.

시민 여러분, 오늘도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전화를 받지 않으셨나요? 우리의 개인정보가 등등 떠다니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2016년 8,700만 명의 정보 유출로 벌금 약 7조원, 집단소송 합의금으로 약 1조원을 배상했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기업의 매출액의 3% 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은 41조이므로 이렇게 계산되는 최대 과징금은 약 1조2천억원입니다. 그런데 4월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1인당 10만원씩 보상하라고 최근 권고했습니다. 총액은 2조3천억 원입니다. 이것을 쿠팡에 적용하면 3조3천억원 이상을 배상해야 합니다.

이번에 반드시 최대 과징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보상금도 받아내야 합니다. 근절이 되지 않는 범죄는 반드시 엄정한 처벌로 재발을 막아야 합니다. 문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은 강제력이 있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은 기업이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이미 SK는 분쟁조정 신청자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유사한 조정안이 나왔을 때 쿠팡도 거부할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본때를 보여야 합니다. 쿠팡 탈퇴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 쿠팡의 무릎을 끊립시다. 시민의 힘으로 쿠팡의 죄를 물읍시다.

제도 정비도 필요합니다. 현재 증권 분야에 머물고 있는 ‘집단소송제’를 반드시 도입하여 한 명의 피해자만 승소해도 모든 피해자가 보상받게 해야 합니다. 과징금 상한도 대기업의 경우 매출액의 10% 수준으로 올려야 하며, 분쟁조정안도 강제력이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실제 피해액보다 배상액을 몇 배로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도입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을 바꾸어도 별무소용일 수 있습니다. 쿠팡은 독점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쿠팡와우 가입자 1,500만 명이 내는 연간 구독료만 해도 1조4천억원이 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의 현행 과징금은 최대 1조2천억원에 불과합니다. “법 위반을 통해 얻는 이익이 벌금보다 크다”고 보기 때문에 법을 계속 위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쿠팡의 플랫폼 독점을 규제해야 합니다. 온라인 독점을 규제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야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업체를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여 데이터 제공 의무 등 공적 의무를 강화하고 자사제품우대, 끼워팔기 등 각종 불공정 행위를 못하게 해야 합니다. 입점 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 및 광고비 상한제도 도입해야 합니다. 알고리즘 조작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강제 조사권’을 도입하며, CEO에 대한 형사고발 규정도 강화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생계를 불모로 과도한 야간 및 새벽 노동을 강요하여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쿠팡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원내대표가 쿠팡에서 70만원 식사를 대접받는 더불어민주당의 말장난을 믿지 맙시다. 녹색당은 시민의 힘으로, 노동자의 힘으로, 우리 단결된 힘으로 쿠팡에 승리하겠습니다.

2. 이백윤 노동당 대표

노동당 대표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문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도착한 그 '로켓배송'의 편리함 뒤에는, 차마 마주하기 힘든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아까워 김밥을 입에 물고 계단을 뛰었다."

어느 쿠팡 배송 기사가 남긴 말입니다. 그는 기계가 아니었지만, 시스템은 그를 기계처럼 다뤘습니다. 지난 2년간 최소 8명의 노동자가 과로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여름 40도가 넘는 물류센터는 에어컨 하나 없는 거대한 찜통이었고, 노동자들은 화장실 갈 시간조차 통제당하며 '시간당 생산량'이라는 숫자에 쫓겨야 했습니다.

이것은 혁신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을 연료 삼아 태우는 21세기판 착취입니다. 심지어 쿠팡은 3천만 명이 넘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도, 진짜 사장인 김범석 의장은 미국 법인 뒤에 숨어 사과 한 마디 없습니다. 국민의 정보와 노동자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기업에게 우리 사회는 너무나 관대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하며 '쿠팡 탈퇴', 이른바 '탈팡'에 동참해주고 계십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불안감도 있고 불의에 눈감지 않는 시민들의 따뜻하고 정의로운 마음도 있습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착한 소비'만으로는 저 거대한 자본의 폭주를 멈추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미 시장을 올 독점한 괴물은 불매 운동 뿐만 아니라 강력한 사회적 통제를 통해 멈춰세워야 합니다. 이제는 '소비자의 선택'을 넘어 '주권자의 힘'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첫째, 국회는 즉각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온플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거대 플랫폼이 입점 업체와 노동자를 쥐어짜고 시장교란으로 더 큰 이익을 가져가는 행위를 법으로 강력히 틀어막아야 합니다. 기업의 선의가 아니라 엄격한 사회적 통제가 필요합니다.

둘째, 사람을 죽게 만든 '진짜 사장'을 처벌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안전보다 이윤을 앞세우다 사고가 나면,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가 감옥에 가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목숨값으로 돈을 벌어가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 이 기형적인 구조를 바꾸기 위해 쿠팡에 대한 엄중한 사법처리가 절실힩니다. "우리는 배송된 물건이 아니라, 배송하는 사람의 안녕을 묻는 사회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상식이고 미래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피눈물 위에 세워진 편리함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사람이 사람답게 숨 쉬며 일하는 사회, 기업의 이윤보다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인 나라를 만드는 길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탈팡'의 분노를 이어,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연대로 나아갑시다. 노동당이 국민 여러분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3. 정동현 쿠팡물류센터지회 지회장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장 정동현입니다.

3,370만 개인정보 유출기업, 산재 은폐 기업, 부당노동행위기업 쿠팡의 수장 범죄자 김범석은 처벌 받아야 합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지 한 달이 다되어 갑니다. 하지만 쿠팡의 실질적인 총수 김범석의 사과는 없습니다. 꼬리 자르고 바지사장을 세워 온 국민의 분노만 돋구고 있습니다. 쿠팡 칠곡물류센터에서 일하시다 돌아가신 고 장덕준님 죽음과, 부천신선센터 코로나 집단감염사태를 덮기 위한 김범석의 직접적인 개입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쿠팡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바라보는 김범석의 천박한 인식 또한 드러났습니다. 한국시장에서의 독점적인 지위만 믿고 법 위에서, 국민 위에서 날뛰는 쿠팡과 김범석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됩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노동조합 활동한지 4년 반이 넘어갑니다. 무수히 많은 노동자들의 죽음이 있어왔습니다. 그 죽음들과 이후의 과정들이 왜 석연치 않았는지, 그리고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죽음들이 왜 계속 반복되는지 내부 폭로를 통해 알려진 김범석의 언행들을 보면 알게 되었습니다. 21년 6월 노조설립이후 지금까지 80차례의 교섭을 하고도 단체협약체결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쿠팡의 산재대응 매뉴얼에서 드러났듯이 쿠팡에게 노조는 ‘오염된 정보’를 전달하는 존재입니다. 쿠팡에서 돌아가신 세 명의 산재사망 노동자 유족들의 청원으로 성사된 지난 1월의 쿠팡청문회에서 대표이사들이 했던 약속들도 가볍게 지키지 않는 기업이 쿠팡입니다. 국회에서 했던 약속도 쿠팡에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쿠팡이 방관하는 사이 쿠팡물류센터에서는 올해에도 네 명의 노동자가 돌아가셨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전의 죽음들과 너무나 비슷한, 반복되고 계속된 죽음들이었습니다. 아직도 현장 내 휴대폰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 전근대적인 노동현장, 법정휴게시간 한 시간을 제외하면 휴게시간이 없다시피 한 노동현장이 쿠팡 물류센터입니다. 현장을 바꾸고자 하는 노동조합에게 갖가지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기업이 쿠팡입니다. 쿠팡이 혁신이라고 자화자찬하는 로켓배송은 쿠팡에서 일하다 죽어가고, 쿠팡에서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입니다. 이제 쿠팡의 악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기입니다. 지금이 절호의 찬스이고, 지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탈팡’이 전 국민적인 화두입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겠지만 단지 쿠팡을 쓰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번을 계기로 쿠팡을 바꿔보고자 하는 마음들이 클 것 같습니다. 쿠팡물류센터지회도 같은 마음으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쿠팡의 잘못을 바꾸고, 범죄자 김범석이 우리 앞에 사죄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을때까지 쿠팡물류센터지회는 현장에서 힘차게 싸워나가겠습니다. 쿠팡을 바꾸려는 노동조합의 투쟁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

최근 쿠팡 김범석 의장이 고 장덕준 님의 사망 사건을 두고 과로 정황을 은폐할 것을 지시한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고 많은 분들이 분노를 느끼셨을 겁니다. 어떻게 한 인간으로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고, 이런 사람이 CEO로 있는 쿠팡이라는 기업이 존속가능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이러한 비인간적인 행태가 쿠팡 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대 정보자본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자 모순이 빅테크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빅테크 플랫폼은 대규모 이용자 규모에 기반하여 독점력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독점력을 남용하여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고 플랫폼에 입주해있는 소상공인을 갈취하며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이미 2020년에 미 하원은 디지털 시장 보고서에서 구글, 애플, 메타, 아마존 등 4대 빅테크 기업의 시장지배에 대해 분석하면서 이들이 단지 디지털 시장을 독점하고 공정한 경쟁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소비자 기반을 장악하고 있는 힘을 기반으로 소비자의 개인정보 권리 를 침해하고, 나아가 플랫폼에 입주한 소상공인에 대한 위협과 폭력을 행사하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음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이들 빅테크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유는 막대한 자금을 동원한 로비를 통해 정책과 규제 환경을 자신의 이익에 맞게 조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쿠팡은 아직 4대 빅테크의 지위를 얻지는 못했지만 빅테크의 행태를 모방하고 추종하는 준 빅테크로서, 글로벌 빅테크 못지 않은 악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가입보다 탈퇴를 몇 배나 힘들게 만드는 다크 패턴으로 유명합니다. 이는 쿠팡이 이용자, 소비자의 권리에 대한 존중보다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주머니를 약탈하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쿠팡과 같은 기업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에 대한 투자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최근 발생한 대량 개인정보 유출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필연에 가깝습니다. 쿠팡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착취 뿐만 아니라, 쿠팡 플랫폼에 입점해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약탈로도 이미 악명을 떨치고 있습니다. 막대한 자금과 로비스트를 동원해 플랫폼 정책과 입법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점도 글로벌 빅테크의 행태와 유사합니다. 글로벌 빅테크와 마찬가지로 쿠팡의 행태 역시 현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유의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쿠팡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하늘을 찌르고 있음에도 이들의 로비력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권리 구제를 위한 단체소송,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무위원회는 단체소송을 통한 손해 배상 소송 제도의 도입만 제외한 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과징금을 상향했다고 하지만, 감독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T에 대해서도 전체 매출액 3%에 턱없이 부족한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고, 그나마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보상은 전무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수많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반대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했던 소비자 집단소송, 단체소송 제도가 이번에 통과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쿠팡을 비롯한 빅테크에 대한 규제는 한편으로는 이용자,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상공인의 권익과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빅테크 자본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부정의한 사회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자본에 잠식되어 있는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쿠팡이 자신의 악행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것은 위협받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5. 하은성 정의당 비상구 노무사

Again 유성기업 노조파괴?

지배·개입 목적으로 회사 분할 추진한 쿠팡 규탄한다! 태평양도 공범이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상구에서 활동하는 하은성 노무사입니다.

어제 SBS, MBC, 한겨레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쿠팡이 회사를 분할하여 CLS라는 자회사를 만든 것이 노조의 조직·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함이었다는 내부 문서가 제보된 것입니다. 그러자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합니다. 한번 봅시다.

문서의 목적에는 "쿠팡의 노조 결성 및 대규모유통업법의 위험을 설명하고, 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인 회사 분할에 대한 의사결정을 받으려고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조 결성이 회사에 위험 요소로 기능하며, 이를 막기 위해 회사를 쪼개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분할에 대한 검토 배경 및 해결 방안'에는 <노무이슈 : 쿠팡맨 노조 결성 가능성 증가>라는 소제목하에 사업체 규모에 따른 노동조합 조직률 자료를 가져와서, "3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체의 조직률은 47.7%로 높음. 현재 쿠팡맨의 수는 3,000여명을 넘어, 노조 결성의 가능성 있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노조 결성의 부정적 효과라며 파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설명하고, 국회 환노위에 참고인으로 CEO가 출석요구될 수 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의 결론은 무엇이냐, <분할로 노조가 결성되는 범위를 줄여야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래에는 친절하게 "노조 결성은 헌법상 권리로 결성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므로"라고 되어 있고, 따라서 "노조결성이 예상되는 조직을 분리단절 시켜, 노조결성 가능성이 낮은 조직 (IT, 스텝 조직 등)까지 노조에 가담하지 않도록 하여, 노조의 규모를 최대한 작게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조 조직·운영·파업 등 노동3권이 헌법상 권리임을 알면서도, 인위적으로 회사를 분할시켜 노

조의 규모를 최대한 작게 만들겠다는 것. 이것은 명백한 노조 혐오에서 비롯한 회사분할로 자체·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고, 미국 기업인 쿠팡이 우리 헌법을 우롱한 것입니다.

심지어 문서 말미 쿠팡은 <노조 결성 및 조직 가입을 막기 위한 회사 분할 프로젝트>를 수행할 자문 법인이 어디냐는 질문에 김앤장, 태평양, 세종 등 대형 로펌에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을 하였는데, 전문성과 적극성 등을 고려해 태평양을 자문 법인으로 선정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성기업 사태와 똑같습니다. 반노조 쿠팡 분할 프로젝트가 법인의 컨설팅 과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쿠팡이 먼저 주도적으로 프로젝트 계획을 세우고, 대형 로펌들에 제안을 하였으며,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태평양이 자문사가 되어 구체적인 분할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쿠팡 CLS를 2018년에 만들고, 쿠팡맨을 2022년 말~ 2023년 초에 자회사로 소속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를 목적으로 자문을 받은 것이고, 회사 돈을 불법과 반헌법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업무상 배임죄에도 해당합니다.

그리고 자문사인 태평양도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미 노조파괴 컨설팅을 한 심종두 노무사는 노무사 자격이 취소되었고, 노무법인 창조컨설팅도 노무법인설립인가취소처분을 당했습니다. 단순 자문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 자회사 분할과 쿠팡맨 전적을 완료했다면 태평양도 공범입니다.

오는 30일부터 쿠팡에 대한 국회 상임위 청문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공소시효 문제를 넘어, 쿠팡이 한 행위는 명백한 반노조·반헌법적 범죄이고 노동자들의 생계를 김범석 자신의 방탄을 위해 희생시킨 것입니다. 쿠팡 CLS로 쿠팡맨 전적이 2022년 말~2023년 초에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공소시효가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 환노위와 노동부는 이 문제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정의당과 정의당 비상구는 이 문제를 놓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